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3단비교)	27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4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2호, 2020. 5.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점검·제출·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등의 시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장 벌칙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7312호, 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75호, 2020. 11. 2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조(조사 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관련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1175호, 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람과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전까지 같은 항에 따

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이용시설(제2조 관련)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과학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은 제외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5.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8.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9. 그 밖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8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제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8조 제5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제8조 제5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5항 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500	750	1,000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100	200	300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행정안전부령 제210호, 2020. 11.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210호, 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 내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교육 실시 결과 (년도)

교육실시기관	시설명		대표자 성명
현황	주소		전화번호
교육실시 결과	전체 종사자(명)	교육대상 종사자(명)	교육실시 인원(명)
	비고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안전교육 실시 현황

1. 교육 실시자 현황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연번	부서	담당업무	성명	교육 일시	교육기관	비고

2. 교육 미실시자 현황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연번	부서	담당업무	성명	교육 미 실시 사유	비고

* 교육 대상자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

[붙임] 교육 이수 증명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

일자	부서	직급	성명	지정 사유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2호, 2020. 5. 26.,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p>[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75호, 2020. 11. 24., 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시행 2020. 11. 27.] [행정안전부령 제210호, 2020. 11. 27., 제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p> <p>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p> <p>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p> <p>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p> <p>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p> <p>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p>	<p>제2조(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 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p> <p>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 	<p>제3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p> <p>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점검·제출·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p> <p>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p> <p>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p>	<p>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등의 시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p> <p>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p>	<p>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 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p> <p>③ 현장조사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행정안 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 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 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 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 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 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권고·시정명령 및 제 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① 행정안전 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에게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 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이행 기간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제7조(조사 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 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p> <p>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 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p>	<p>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린이가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p> <p>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p>	<p>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p> <p>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p> <p>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p> <p>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p>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p> <p>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p>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p>	<p>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p> <p>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p>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 <p>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p>	<p>제3조(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별지 제4</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 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p>제10조(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관련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p>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p>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 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7312호, 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175호, 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람과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전까지 같은 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부칙 〈제210호, 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1.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2호, 2020. 11.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
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 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제6조(재검토키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2호, 2020.11.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 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전문강사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 2)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체험 교구 확보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교육생 20명 기준)
1. 마네킹(영아, 소아, 성인)	종류별 교육생 4명당 1개(총 15개, 종류별 5개)
2.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생 4명당 1개(총 5개)
3. 페이스 실드(일회용 구급소생마스크)	교육생 1명당 1개(총 20개)
4.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총 5개)
5. 구급함	교육생 20명당 1개

비고. 체험 교구는 실습용 또는 교육용이 가능하며, 교구명칭이 상이해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 체험 교구는 가능함